

##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다은\*·서원석\*\*

###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Daeun Lee\*·Wonseok Seo\*\*

**요약** :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최저 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주거 특성은 무자녀 및 유자녀 가구 모두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유자녀 가구보다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전세나 자가에 거주할수록, 특히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자녀 가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할수록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출산정책 수립 시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능 강화, 가구 구성에 따른 미시적인 세부 정책 수립, 양호한 보육환경을 갖춘 양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 저출산, 출산 의사, 주거특성, 주거환경, 주택정책

**ABSTRACT**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occupancy type, housing type, and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ffected the childbirth intention to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hose without children. Secon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out children when living in jeonse or their own homes rather than monthly rent and also living in an apartment. On the other hand, those factors did not have any significance for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 children. Third, both types of households had les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y experienced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t was the only residential characteristic that negatively affected childbirth intention to both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rovements of housing stability and poor living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micro-level policy according to the household type, and the consideration of a nurturing and education-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 Low fertility, childbirth intentio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housing policy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 교신처자 (E-Mail: wseo@cau.ac.kr, 02-820-5955)

## I.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1.14명), 홍콩(1.07명), 대만(1.06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가 되었다<sup>1)</sup>. 저출산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임보영 외, 2018).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이미 2016년에 평균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25개 모든 구에서 1명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으로는 만혼화, 경제적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제 불안,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사회문화적으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성 역할 부담의 관행 등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지연 및 기피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천현숙, 2013).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 중 주거 문제는 출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를 늦추는 만혼화를 유발하여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삼식·최효진, 2012; 천현숙 외, 2016; 이다은·서원석, 2019b).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 정책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8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마련해 주거 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서울시 보도자료<sup>2)</sup>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신혼부부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거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있어 좁은 주거면적은 가족 단위의 ‘탈서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적당한 크기의 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향 이동을 어렵게 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수욱, 2016; 정유승, 2018; 이다은·서원석, 2019a). 이를 통해 결혼한 서울시 가구들은 출산하는 데 있어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문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처해있는 주거 특성과 출산 의사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거상황을 고려하지

1) “한국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 중앙일보, 2019년 8월 28일.

2) “서울시,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9년 10월 29일.

않거나 일부 특성만을 포함하였을 뿐, 저출산 문제와 주거상황이 가장 열악한 서울을 중심으로 출산과 관련 있는 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 또한,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면적만을 주요하게 다루었을 뿐 설비나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 지하·반지하·옥탑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출산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을 공간적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들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경험에 따라 출산 계획은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을 무자녀 가구,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각 가구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과 관련된 가구의 구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미시적인 주택 및 주거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이 처한 인구사회 그리고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높아질수록 출산 계획은 없으나, 늦은 결혼으로 초혼 나이가 많으면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7; 신혜원 외, 2009; 우해봉·장인수, 2019).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염지혜, 2013), 일부 연구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정은희·최유석, 2013; 송유진, 2014).

출산에 있어 취업이나 경제활동 상태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배우자인 남성이 취업하였거나, 임금 근로 또는 고용주일 경우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신인철, 2009; 송유진, 2014).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취업해 있을수록,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일수록 출산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전지혜, 2013). 다만 일부 연구는 취업한 여성일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송유진, 2014; 이승주·문승현, 2017).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는 기존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 의사는 감소하였다(신인철, 2009; 염지혜, 2013; 송유진, 2014; 이승주 외, 2017). 거주지역의 경우 천현숙 외(2016)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거주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은경·박신애(2019) 역시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거 특성 또한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대체로 점유 형태, 주택 규모, 주택 유형 등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먼저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일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첫 자녀를 출산하거나 추가로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림·이지혜, 2017; 이상포·노정현, 2017; 박서연, 2019).

주택 규모와 관련해 천현숙 외(2016)는 15평 이하일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모두 출산을 연기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작은 규모의 주택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 수를 통해 주택 규모를 파악한 곽윤철(2017)도 방 수가 많을수록 즉, 주택 규모가 클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할수록 긍정적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서연, 2019). 이 외에도 주택 노후도는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천현숙 외, 2016; 이상포·노정현, 2017).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가와 같은 점유 형태, 넓은 주택 규모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은 첫 자녀 또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연령, 결혼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자녀 수 등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파악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인구나 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부 주택 관련 특성과 출산 의사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주거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차별적일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가구 형태를 구분하지 않거나 첫 출산 또는 후속 출산 중 하나의 경우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주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에 따라 가구를 구분한 뒤 점유 형태, 주택 유형, 노후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를 포함하는 주거 특성이 가구 유형별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III. 분석의 틀

#### 1. 변수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DS)의 원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를 통해 제공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전체 국민과 주택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정책 수립 및 개발에 활용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이다. 이 자료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주택 특성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5~39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인면서, <표 2>의 최저주거기준 제 2조에 명시된 6개의 표준 가구 구성<sup>3)</sup> 중 1인 가구를 제외한 부부, 자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만을

3) 표준 가구 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총 22개의 가구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유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총 865만 개의 표본 중 불완전 자료이거나 이상치를 제외한 46,302개 연구 대상 표본(무자녀 가구 15,324개, 유자녀 가구

30,978개)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기초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혼인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표 1>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

구분	설명	단위	무자녀 가구				유자녀 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출산 의사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0=없음, 1=있음)	더미	0.81	0.39	0	1	0.30	0.46	0	1	
개인 특성	연령	여성의 연령	세	31.54	3.14	25	39	33.80	2.94	25	39	
	초혼연령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연령	세	29.20	3.02	17	39	27.90	2.89	17	38	
	교육수준	1=받지 않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2, 3년제), 6=대학교(4년제 이상), 7=대학원 이상	명목	5.71	0.87	1	7	5.59	0.9	1	7	
	여성 경제 활동	전업주부 (참조)	0=전업주부 외, 1=전업주부	더미	0.27	0.44	0	1	0.52	0.5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67	0.47	0	1	0.43	0.49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남성 경제 활동	무직 (참조)	0=무직 외, 1=무직	더미	0.06	0.23	0	1	0.03	0.18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84	0.36	0	1	0.83	0.37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10	0.3	0	1	0.13	0.34	0	1
	독립 변수	가구 특성	자녀수	명	-	-	-	-	1.47	0.57	1	3
다른 주택		타지 주택 소유 여부 (0=없음, 1=있음)	더미	0.10	0.3	0	1	0.15	0.36	0	1	
거주 지역		도심권(참조)	0=도심권 외, 1=도심권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동북권	0=동북권 외, 1=동북권	더미	0.28	0.45	0	1	0.31	0.46	0	1
		동남권	0=동남권 외, 1=동남권	더미	0.21	0.4	0	1	0.21	0.41	0	1
		서북권	0=서북권 외, 1=서북권	더미	0.12	0.32	0	1	0.11	0.31	0	1
		서남권	0=서남권 외, 1=서남권	더미	0.33	0.47	0	1	0.32	0.47	0	1
주거 특성		점유 형태	자가	더미	0.26	0.44	0	1	0.38	0.48	0	1
		전세	0=전세 외, 1=전세	더미	0.54	0.5	0	1	0.48	0.5	0	1
		월세 (참조)	0=월세 외, 1=월세	더미	0.20	0.4	0	1	0.14	0.35	0	1
	주택 유형	아파트 (참조)	0=아파트 외, 1=아파트	더미	0.50	0.5	0	1	0.63	0.48	0	1
		단독	0=단독 외, 1=단독	더미	0.22	0.41	0	1	0.15	0.36	0	1
		연립/다세대	0=연립/다세대 외, 1=연립/다세대	더미	0.28	0.45	0	1	0.22	0.41	0	1
	주택노후도	1=10년 이하, 2=11~20년, 3=21~30년, 4=31년 이상	명목	2.49	1.01	1	4	2.49	0.97	1	4	
	최저주거기준	0=기준 충족, 1=기준 미달	더미	0.05	0.21	0	1	0.18	0.38	0	1	
표본 수				15,324				30,978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있음(1) 또는 없음(0)으로 응답한 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81%가 출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자녀를 한 명이라도 출산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2.7배 이상 낮은 30%만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특성, 가구 특성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주거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인 연령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평균 31.5세, 유자녀 가구는 33.8세로 유자녀 가구가 높았으나, 초혼연령은 29.2세, 27.9세로 무자녀 가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평균 4년제 이상 대학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전업주부,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하고 전업주부를 참조변수화 하였다.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로자가 6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27% 정도였지만, 유자녀 가구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52%, 임금근로자는 43%로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두 가구 모두 자영업이 가장 적었다.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동은 자료의 한계와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의 주된 소득일 경우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와 같이 가구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종사상 지위에 따라 무직,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하고 무직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 모두에서 임금근로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무직 순이었으며, 유자녀 가구의 무직은 3%로 무자녀 가구(6%)보다 2배가량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특성인 자녀 수는 이전에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자녀 가구 모형에만 포함하였는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무로 무자녀 가구는 약 10%, 유자녀 가구는 15% 정도가 다주택 가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생활권역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구분하고, 도심권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5개의 생활권역 중 서남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 도심권이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특성에는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주택 노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포함하였다.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월세와 아파트를 참조변수로 사용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전세, 자가, 월세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자녀 가구의 자가는 38%, 월세는 14%인 반면, 무자녀 가구의 자가는 26%, 월세는 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무자녀 가구는 유자녀 가구보다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 노후도의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건축 연한으로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평균적으로 21~30년 정도 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주거 빈곤의 상태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파악 가능한 기준인 주거면적 및 방 개수(제 2조), 설비기준(제 3조)은 <표 2>의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에 수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달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항목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기존 연구들에서 방열,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반지하, 지하, 옥탑 거주를 해당 기준 미달로 판단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김동배 외, 2012; 박정민 외,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b). 무자녀 가구 중 5%, 유자녀 가구 중 18%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최저주거기준

제 2조.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 구성 <sup>1)</sup>	실(방) 구성 <sup>2)</sup>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교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제 3조.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 2)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 3) 전용 수세식화장실
- 4) 목욕시설(전용 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제 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1)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출처: 최저주거기준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김비오(2019) 표-2 재인용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명목척도일 때, 연속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이라는 가정 충족이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이승주 외, 2017; 이다은 외, 2018). 따라서 종속변수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질 때는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선형회귀가 아닌 S자 형태의 로지스틱함수를 가정하는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해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응답이 '있음' 또는 '없음'과 같은 2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이변량 변수일 경우에 사용하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지스틱모형은 독립변수(X)에 따라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이때의 발생확률(p)은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종속변수가 1일 때 확률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함수 형태는 <식 2>와 같이 비선형 형태의 회귀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환길·김기홍, 2012; 김리영·서원석, 2016).

$$p(X) = p(y = 1|x) = F(\beta_0 + \beta_1 X) \quad \text{식 (1)}$$

$$p = F(\beta_0 + \beta_1 X) = \frac{\exp(\beta_0 + \beta_1 X)}{1 + \exp(\beta_0 + \beta_1 X)} \quad \text{식 (2)}$$

여기서 로짓(logit) 변환을 통해 S자 형태의 로지스틱 곡선을 직선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이때  $\log(p_i/1-p_i)$ 는 종속변수를, X는 독립변수를,  $\beta$ 는 계수를,  $\alpha$ 는 상수를 의미한다(성진욱·남진, 2016).

$$\log\left(\frac{p_i}{1-p_i}\right)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quad \text{식 (3)}$$

로지스틱모형에서는 계수 값뿐만 아니라 승산비(Exp(B) 또는 odds ratio)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승산비는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에 대비한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따라서 승산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 IV.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주거 특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인지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인지에 따라 출산 의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출산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모형 1)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유자녀 가구(모형 2)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 적합도의 경우, 두 모형 모두 상수항만 포함한 상수모형보다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최종모형의 -2로그우도 값이 감소한 것을 통해 실증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가 무자녀 가구(모형 1)와 유자녀 가구(모형 2)의 출산 의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seudo R2인 Cox&Snell R2 및 Nagelkerke R2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0.08-0.12, 유자녀 가구는 0.25-0.36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비교적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모두 10 이하로 변수 간 과대추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분석모형 적합도

구분		무자녀 가구 (모형 1)	유자녀 가구 (모형 2)
-2로그우도	상수모형	14,813.559	37,692.078
	최종모형	13,612.394	28,612.665
우도비 검정	카이제곱	1,201.165	9,079.413
	자유도	18	19
	유의확률	.00	.00
Pseudo R2	Cox&Snell	0.08	0.25
	Nagelkerke	0.12	0.36

실증분석 결과, 먼저 인구 특성의 연령, 초혼 연령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출산 의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 연구와 같이 출산에 대한 의사를 더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은기수, 2001; 김정석, 2007; 신혜원 외, 2009). 이는 연령의 경우 여성의 가임 가능 기간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며(송유진, 2014), 초혼 연령의 경우 늦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따라잡기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도난영·최막중, 2018). 교육수준은 무자녀 가구

에서만 유의미하였으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Brodmann et al. 2007; 류기철·박영화, 2009; 송유진, 20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인해 첫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유자녀 가구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일수록 전업주부보다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참여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 큰 부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유미·곽혜경, 2004; 신혜원 외, 2009). 이와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출산 이후 높아진 복귀장벽 및 임금손실 등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보인다(김지경·조유현, 2003; 김종숙·이지은, 2012).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배우자가 무직보다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가하여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송유진, 2014). 무자녀 가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구 특성인 자녀 수의 경우 많아질수록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는데, 승산비가 7.8배<sup>4)</sup>로 가장 높아, 기존 양육 자녀가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기존 자녀와 동일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가구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 않고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구는 교육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교육 중 기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er and Lewis, 1973; 이승주 외, 2017). 다음으로 현재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수록 첫 출산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은 가구의 자산으로 자산이 다자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은정 외, 2011)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도심권 거주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용(2009)은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의 출산 의사가 감소하고, 박서연(2019)은 지역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신혼부부의 출산 확률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이 높은 도심권에 거주하는 무자녀 가구는 출산을 연기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도심권에 거주할 때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후속 출산 계획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김은경·박신애, 2019), 서울 도심권은 문화시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지역<sup>5)</sup>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이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근린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양육 시설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첫 자녀와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허만형, 2020), 도심권은 1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평균 20만 원으로 다른 권역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73만 원(2명), 133만 원(3명), 183만 원(4명)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으며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4) <표 4>의 자녀 수 승산비(0.128)는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있을 확률로, 출산 의사가 있을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변수의 계수 값이 음수(-)로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출산 의사가 없을 때의 승산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승산비에 역수(1/0.128)를 취하여 계산하였다.

5)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분석에 따르면, 도심권은 서울시 지표값(1.14) 대비 8배 이상 높은 8.98로 전반적으로 많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6)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각 지역 및 자녀수별 출산장려금을 파악하여 권역별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동북권(1명-10만 원, 2명-34만 원, 3명-70만 원, 4명-131만 원), 동남권(1명-18만 원, 2명-40만 원, 3명-75만 원, 4명-150만 원), 서북권(1명-10만 원, 2명-35만 원, 3명-73만 원, 4명-150만 원), 서남권(1명-11만 원, 2명-40만 원, 3명-97만 원, 4명-174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실증분석 결과

구분		무자녀 가구(모형 1)			유자녀 가구(모형 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1.580***	25.162	-	5.098***	456.109	-	
개인	연령	-0.241***	734.520	0.786	-0.251***	1,505.51	0.778	
	초혼연령	0.211***	536.030	1.235	0.182***	765.060	1.200	
	교육수준	0.098***	14.123	1.103	0.014	0.583	1.014	
	여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168***	10.953	0.845	-0.024	0.603	0.976
		자영업	-0.277***	8.530	0.758	0.066	0.841	1.068
	남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46***	29.238	1.584	0.07	0.790	1.073
자영업		0.566***	28.282	1.761	0.159*	3.307	1.172	
가구	자녀수	-	-	-	-2.054***	2,494.77	0.128	
	다른주택	0.321***	17.093	1.379	0.091**	4.717	1.095	
	거주 지역	동북권	0.366***	15.780	1.442	-0.162**	5.248	0.850
		동남권	0.346***	13.119	1.413	-0.178**	6.000	0.837
		서북권	0.013	0.018	1.013	-0.196**	6.256	0.822
		서남권	0.273***	9.140	1.314	-0.188***	7.220	0.82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37***	25.102	1.401	-0.02	0.174	0.980
		전세	0.366***	42.600	1.442	0.052	1.389	1.053
	주택 유형	단독	-0.204***	10.597	0.815	-0.024	0.261	0.976
		연립/다세대	-0.113**	4.117	0.893	0.053	1.937	1.054
	주택노후도	0.027	1.338	1.027	-0.022	2.014	0.978	
	최저주거기준	-0.179*	3.444	0.836	-0.086*	3.728	0.918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주거 특성에 있어서 무자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유의미하였으나, 유자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만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 특성은 유자녀 가구보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자녀 가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월세보다 전세 또는 자가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천현숙 외, 2016; 이상림·이지혜, 2017), 주택 특성 중 승산비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불안정이 높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첫 자녀 출산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유형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할수록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생활환경의 편리성과 양호한 보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이상포·노정현, 2017),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편리성 및 교육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장진희·박성준(2015)은 자녀

양육에 있어 아파트가 더 선호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지하, 반지하, 옥탑방과 같은 여건은 기본적인 주거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이다은·서원석, 2019b), 열악한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세대 내에서 재생산, 세대 간 전이될 가능성이 커 자녀를 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우려(박문수, 2000; 임세희, 2010; 박신영, 2012)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주거 특성이 각 가구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 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경우 동일한 개인, 가구, 주거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출산 의사에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에 거주할수록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낮았으나,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출산의 경우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다자녀 출산의 경우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문화시설의 접근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주거 특성의 경우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무자녀 가구가 더 많은 주거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거 특성 중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자가나 전세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가 있었던 반면, 유자녀 가구는 주택유형이나 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편리한 생활환경, 보육환경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주거 안정이, 다자녀 출산에는 있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 등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의 시점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7)</sup> 이러한 측면에서

7) ‘끝이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동아일보, 2018년 3월 1일.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노동 탄력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처해있는 열악한 주거상황의 개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주택 및 주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적인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이하므로 출산 관련 주택정책에 있어 가구 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상태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주택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완화,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황,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를 위해 양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양육 관련 시설을 확대 입지시키거나, 주택 공급시 보육 시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의사에는 가치관, 가구 소득, 아동의 개인 특성, 주거비 부담 등과 같이 더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이 없어 더 미시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거와 출산 의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곽운철, 2017,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 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유병선·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리영·서원석, 2016, "공동주택 초기계약률의 결정요인 분석연구", 「GRI연구논총」, 18(3): 23~43.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 김은경·박신애, 2019, "후속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및 지역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 443~454.
- 김은정·이성림·이완정·김한나, 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 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종숙·이지은, 2012, "PSM 방식을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손실 추정", 「여성연구」, 82(1): 75~101.
- 김지경·조유현,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도난영·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 류기철·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 박문수, 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 방안」, 서울: 대한주택공사.
-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 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 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59~72.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형 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 박정민·오옥찬·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 101~123.
- 성진욱·남진, 2016, "이항로지모형을 이용한 가로주택정비 사업 찬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5: 161~175.
- 송유진, 2014,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39~347.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신혜원·최명섭·김의준, 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 염지혜, 2013,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강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5: 43~63.
- 우해봉·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이다은·강수진·강민성·서원석, 201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6(2): 31~46.
- 이다은·서원석, 2019a,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100: 45~60.
- \_\_\_\_\_, 2019b,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학회」, 17(4): 75~89.
- 이성용, 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0.
- 이수욱,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 「국토정책 Brief」, (560): 1~8.
- 이상식·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포·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35(1): 273~289.
- 이상주·문승현, 2017, “직장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 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159~155.
- 이상주·이소민·문승현, 2017, “부모·자녀의 이중부양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9: 111~138.
- 이환길·김기홍, 201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제군 산사태지역의 위험도평가”, 「한국측량학회」, 30(3): 313~321.
- 이희연·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문우사.
- 임보영·강정구·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 137~151.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장진희·박성준, 2015,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전지혜, 2013,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 경제적·지역적 변수의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유승, 2018,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정책”, 「도시문제」, 53(597): 40~43.
- 정은희·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천현숙,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정책 보완방안”, 「국토정책 Brief」, 423: 1~8.
- 천현숙·이길제·김준형,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유미·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을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지」, 13(1): 29~40.
- 허만형, 2020,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24(1): 51~67.
- Becker, G. S. and H. G. Lewis,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279~288.
- Brodmann, S., Esping-Andersen, G., and Güell, M., 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599~613.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5월 26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20년 6월 11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 2020년 9월 8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20년 10월 14일